

---

#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

---

2019. 11. 28.

교육부

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

## 〈 목 차 〉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추진경과 .....                 | 2  |
| III.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.....      | 4  |
| 1. [고교]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.....  | 5  |
| 2. [대학] 평가의 투명성 · 전문성 강화 ..... | 8  |
| 3. 대입전형 구조개편 .....             | 10 |
| IV. 추진 로드맵 .....               | 12 |

# I. 추진배경

## □ 대입전형간 불균형 심화 및 학생·학부모 불신 지속

-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종 및 논술위주 전형을 선호하여 수능 등 타 전형에 비해 운영 비중이 높은 상황

< 전형유형별 운영 현황 ('21학년도 입시 기준) >

| 구분  |    | 학생부위주   |        |         | 수능<br>위주 | 논술<br>위주 | 실기<br>위주 | 기타    | 합계      |
|-----|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    |    | 교과      | 종합     | 소계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|
| 전체  | 인원 | 147,194 | 86,507 | 233,701 | 70,771   | 11,162   | 27,177   | 4,636 | 347,447 |
|     | 비율 | 42.4    | 24.9   | 67.3    | 20.4     | 3.2      | 7.8      | 1.3   | 100.0   |
| 서울  | 비율 | 13.5    | 38.9   | 52.4    | 28.9     | 8.9      | 8.2      | 1.6   | 100.0   |
| 수도권 | 비율 | 20.9    | 34.3   | 55.2    | 27.3     | 7.0      | 8.7      | 1.8   | 100.0   |
| 지방  | 비율 | 55.7    | 19.1   | 74.8    | 16.1     | 0.8      | 7.3      | 1.0   | 100.0   |

- 반면, 학생·학부모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
  -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 유형·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,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발생

## □ 실태조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 확인

- (학종 운영과정) 고교프로파일 등을 통해 출신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, 전형자료가 10분 내외로 평가되는 등 부실운영 정황 확인
- (학종 운영기반) 평가요소·배점기준 등 평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미흡 등 확인
- (학종 선발결과) 과학고>외고·국제고>자사고>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종 선발결과에 나타났으며, 소득·지역별 격차 확인

## II. 추진경과

### □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추진

-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 구성 : '19.10.1
  - '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발표('18.8.17) 이후에도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- 학생부종합전형 집중 실태조사 : '19.10.11.~10.24.
  - (구성) 교육부 내·외 24명
  - (조사대상) 학종 비율이 높고, 특목고·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등 13개 대학
    - ※ 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광운대, 동국대, 서강대, 서울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춘천교대, 포항공대, 한국교원대, 홍익대
-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: '19.11.5.

### □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

- (대학) 서울·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(10.31.)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(11.18.), 대학별 방문 면담(11.1.~27.)
- (시도교육청)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(11.8.), 전국혁신교육담당관협의회(11.21.)
- (학부모) 학부모간담회(11.22.)
- (국회 토론회) 더불어민주당(10.29.), 바른미래당(11.4.), 민주평화당(11.8.)

## <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주요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>

### 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정

- (고교 영향력) 평가전산시스템에서 출신고교 정보제공, 기재금지사항이 포함된 프로파일, 특정고교유형에 유리한 특기자전형 등 출신고교가 대입에 영향  
- 지원자·합격자의 내신등급 평균이 고교유형에 따라 큰 차이
- ☞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
- ☞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
- ☞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, 일반고 역량 강화
- (평가 신뢰성) 일부대학에서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%
- ☞ 적정 사정관 확보 및 세부평가단계에서도 다수 평가 실시
- (기재금지 및 표절 검증·처리) 대학별로 기재금지·표절 기준 및 처리 절차가 상이하고, 실질적 불이익 처분 부족
- ☞ 전형자료 생성에 대한 고교·교육청의 책무성 강화, 대학의 위반사항처리 강화

### ②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기반

- (평가정보 공개) 모집요강(전형계획)에 평가 관련 정보가 추상적·불명확
- (회피·배제 등) 해당학과 교수 평가자 배정, 교직원 자녀 합격은 공정성 문제 우려
- ☞ 평가기준 등 정보공개 확대, 면접관 동일학과 연임금지, 회피·배제 강화 등

### ③ 학생부종합전형 선발결과

- (고교유형별) 과학고>외고·국제고>자사고>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단계부터 합격, 등록단계까지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나타남
- (지역별) 전국 평균 대비, 학종과 수능에서 서울지역 합격자 비중이 높음
- (부모소득별) 13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
- ☞ 지역균형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
- ☞ 기회균형전형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입학기회 보장

### Ⅲ.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



## 1

## [교교]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

## ①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

❖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,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·자기소개서·교사추천서 개선

## ①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폐지

-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('22~'23학년도, 現 고1~중3 적용)
-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 ('24학년도, 4년 예고, 現 중2부터 적용)

※ 비교과영역의 구성·운영은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정('22)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

## &lt;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(요소) 개선 현황 &gt;

| 구분       |           | 現 고2~고3<br>(20~21학년도 대입)  | 現 중3~고1<br>(22~23학년도 대입)  | 現 중2<br>(24학년도 대입)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|--|
| ① 교과활동   |           | ▪ 과목당 500자  | ▪ 과목당 500자<br>▪ 방과후학교 활동(수강)<br>내용 미기재  | ▪ 과목당 500자<br>▪ 방과후학교 활동(수강)<br>내용 미기재<br>▪ 영재·발명교육 실적<br>대입 미반영             |
| ② 종합의견   |           | ▪ 연간 500자   | ▪ 연간 500자   | ▪ 연간 500자  |
| ③ 비교과 영역 | 자율활동      | ▪ 연간 500자   | ▪ 연간 500자   | ▪ 연간 500자  |
|          | 동아리<br>활동 | ▪ 연간 500자<br>▪ 정규·자율동아리,<br>청 소 년 단 체 활 동,<br>스포츠클럽활동 기재<br>▪ 소논문 기재 가능 | ▪ 연간 500자<br>▪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<br>(30자)만 기재<br>▪ 청소년단체 활동은<br>단체명만 기재<br>▪ 소논문 기재 금지 | ▪ 연간 500자<br>▪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<br>▪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<br>▪ 소논문 기재 금지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봉사활동      | ▪ 연간 500자<br>▪ 실적 및 특기사항  | ▪ 특기사항 미기재<br>▪ 교내·외 봉사활동실적<br>기재   | ▪ 특기사항 미기재<br>▪ 개인봉사활동 실적<br>대입 미반영<br>단, 학교교육계획에 따라<br>교사가 지도한 실적은<br>대입 반영 |
|          | 진로활동      | ▪ 연간 700자   | ▪ 연간 700자<br>▪ 진로희망분야 대입<br>미반영   | ▪ 연간 700자<br>▪ 진로희망분야 대입<br>미반영  |
|          | 수상경력      | ▪ 모든 교내수상   | ▪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<br>(3년간 6건) 대입 반영  | ▪ 대입 미반영   |
|          | 독서활동      | ▪ 도서명과 저자   | ▪ 도서명과 저자   | ▪ 대입 미반영   |

※ (미기재) 학생부에서 삭제, (미반영) 학생부에는 기재하되, 대입자료로 미전송

## ②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

-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('21학년도, 現 고2)
-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('22학년도~'23학년도, 現 고1~중3 적용)
  - 4개 문항 5,000자에서 3개 문항 3,100자로 축소
  - ※ '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('18.8.17)
- 자기소개서 폐지 (4년 예고제, '24학년도, 現 중2 적용)

## ③ 교사추천서 폐지

-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('21학년도, 現 고2)
- 교사추천서 폐지 ('22학년도, 現 고1 적용)
  - ※ '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('18.8.17)

## ②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

❖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평가·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

### ① 교원의 평가·기록 역량을 강화하고,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

- (교원 역량 강화) 수업-평가-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모듈 개발 및 연수 확대, 고교 교사-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 추진('19.下)
- (교과세특 기재) '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 기재를 단계적\*으로 필수화하고, 기재 표준안 현장 보급('20)
  - \*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
- (불공정 기재 조치) 학생부 허위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 발생 시 국·공·사립 교원 모두에게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('19.下)

#### <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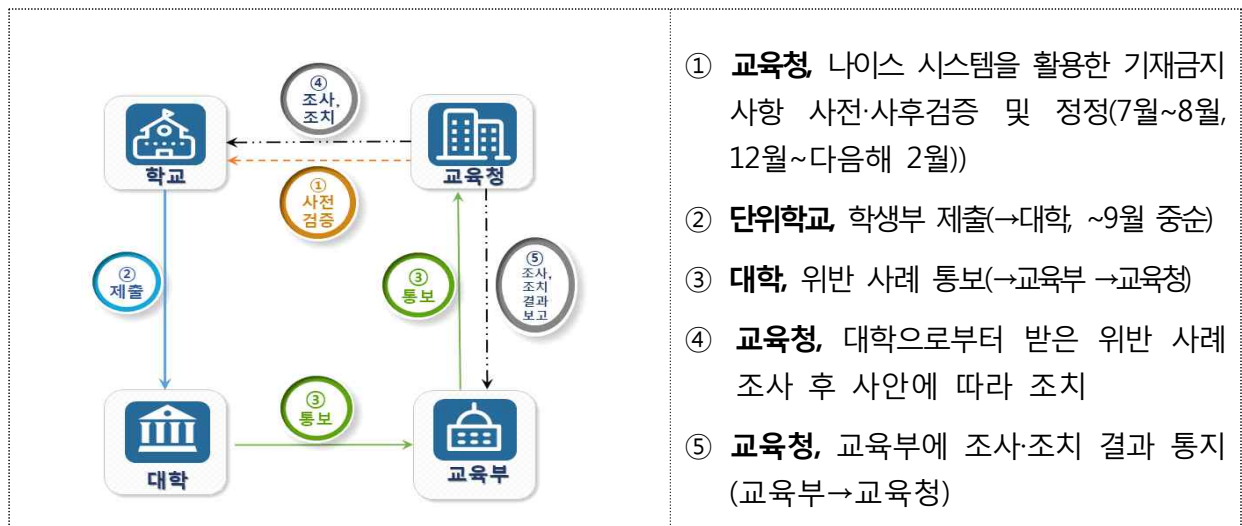
- ▶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, 논문 등재, 도서 출간, 발명특허, 교외 경시대회, 해외 봉사활동, 공인어학시험, 교외수상실적, 인증 취득 등



## ② 고교·교육청의 학생부 평가·기록에 대한 책무성 제고

- (학종 실태조사 후속조치) 학생부 기재금지 위반 및 고교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·교원에 대한 조치(교육청)
  -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안내('19.12), 교육청에서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('20.1)
- (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)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에 기재 금지어 목록을 추가('19.12~'20.2)하여 단위학교 및 교육청별 검증 강화
  - ※ 4세대 나이스 내 지능형 검증 솔루션 시스템 도입('22) 검토

### < 학생부 검증 시스템 운영 절차(안)>



- (기재금지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) 대학은 평가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교육부에 보고 (교육부 → 교육청)
  - 교육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해당학교·교원을 처벌하고, 대학은 교육청 감사결과 비위정도에 따라 해당학생의 입학취소
- (관리감독 강화)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,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('20.3~)

## ①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

❖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,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공성 강화

## ①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('20~)

-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여,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(면접 → 면접, 서류평가)

-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정보의 평가반영 차단

## ②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공개('20)

- 대교협과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,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

- 평가항목 및 배점,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,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

## ③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 강화

- (회피·배제 강화) 회피·배제의 재검증 및 사후검증을 의무화('20)

※ 대학 입학전형 회피·배제 가이드라인 기 마련(대교협, '19.10)

- (감사 강화)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목록을 추가\*하고,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

- 대학별로 매학년도별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(외부인사 포함)하고 대교협에 결과 보고('20~)

\* 전형 관련 절차 마련 및 준수, 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·운영, 자소서(추천서)기재 금지 위반·표절 처리, 교직원 자녀 전형과정, 평가시스템 내 부적절 정보 제공 등

- (평가과정의 공공성 강화) ▲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▲평가 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▲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▲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

**< 외부공공사정관 >**

- ▶ 대학이 고교 교사(교장), 교육청관계자, 교육전문가, 타 대학 교수 등을 외부공공사정관으로 선정하여 대입전형 평가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

※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부 운영 후 확산

-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규정 신설('20)

- (정보공시 확대) 전형유형마다 고교유형(외고·일반고 등)·지역별(특별·광역시·중소도시·읍면 등) 선발결과,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공시  
※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('20.上)

## ②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

❖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,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

- (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) 대교협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을 개정('20)하고,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

**<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>**

- ▶ 1인당 서류평가 시간 확보
- ▶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
- ▶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
- ▶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의 조정 방안
- ▶ 최종 전형위원회 외부인 참여 방안
- ▶ 기재금지사항 처리방안
- ▶ 이의신청 처리기준·절차 마련

- (평가 전문성 확보) 평가 세부단계에서도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및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권고

- (평가시간 확보)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및 평가자별 평가시스템 접속 기록을 10년간 보존('20~)
  - ※ 대교협과 함께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 1인당 적정 평가시간 마련
- (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유도) 대학별 전임사정관 수 및 정규직 비율,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 정보공시
  - ※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('20.上~)
- (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)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체 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(대교협)하고,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 상향('20)
  - ※ 위촉사정관 교육시간 : (신임) 30시간, (경력) 15시간 → (신임/경력) 40시간

### 3

### 대입전형 구조개편

- ❖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확대
- ❖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
- ❖ (가칭) '사회통합전형'을 법제화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

#### ①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('22학년도~'23학년도, 現 고1~중3 적용)

- (단기)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'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% 이상 완성('21학년도 대비 5,625명 (38.0%) 增)

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건국대  | 경희대  | 고려대  | 광운대 | 동국대 | 서강대 | 서울시립대 | 서울대 |
| 서울여대 | 성균관대 | 숙명여대 | 숭실대 | 연세대 | 중앙대 | 한국외대  | 한양대 |

- ※ 선정기준 : 학종·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% 이상
- 고교유형,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
-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,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
- ※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'23학년도까지 40%로 상향하되,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'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

- (중장기)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제 마련 ('28학년도, 現 초4 적용)
  -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제\* 마련('21)

\* 논·서술형 유형 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

## ②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

- (논술위주전형 폐지)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 폐지 유도
  - ※ ('16) 14,861명(4.18%) → ('18) 13,310명(3.82%) → ('20) 11,162명(3.21%)
- (특기자전형 폐지)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·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
  - ※ 전체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: ('16) 7,253명(2.04%) → ('20) 3,935명(1.13%)
  - 어학·글로벌 특기자 : ('16) 2,387명(0.67%) → ('20) 710명(0.20%)

## ③ [가칭] 사회통합전형 도입 · 법제화(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, '20)

-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 도입
  -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10% 이상 의무화
    - ※ ('19)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11.1% 선발 (수도권 8.9%, 지방 12.6%)
  - 지역균형 선발\*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% 이상 및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 (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%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% 이상 상향 유도)
    - \* 다만, '수도권 이외 대학'은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같음
-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 도모

## Ⅳ. 추진 로드맵

| 과제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형<br>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| '21학년도   | '22학년도  | '23학년도   | '24학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학생부<br>비교과영역<br>축소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기재금지사항<br>검증 강화   | ·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<br>(소논문 기재 금지, 수상경력 대입 제공<br>제한,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) |          | ·정규교육과정 외<br>비교과활동 대입<br>반영 폐지 |
|    | 고교·교원<br>책무성 강화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('20.3월 ~)<br>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('20.3월 ~)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자기소개서,<br>교사추천서         | ·기재금지사항 검증<br>강화 및 불이익<br>조치 철저 | 자기소개서 개선<br>(문항 및 글자 수 축소)   |   | 자기소개서 폐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사추천서 폐지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학종 운영의<br>투명성 강화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(면접→서류+면접)<br>·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<br>·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<br>·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<br>·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<br>·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,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<br>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<br>·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학종 운영의<br>전문성 강화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,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<br>·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: 신입, 경력 모두 40시간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정시<br>수능위주전형<br>확대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6개 대학 수능 40% 이상<br>( '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16개 대학 수능<br>40% 이상            |
|    | 사회통합전형<br>도입·의무화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사 회 통 합 전 형<br>법적 근거 마련<br>·재정지원과 연계<br>하여 확대   | ·재정지원과 연계 (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% 이상<br>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% 이상 권고)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특기자전형 및<br>논술위주전형<br>폐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**[별첨]**

**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
질의 · 답변(Q&A)**

**Q1.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였는데,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**

- 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-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신이 높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 아울러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
-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
**Q2.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과 40%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**

- ☐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%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. 이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입니다.
- ☐ 확대 권고 비율은 ▲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▲작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이 약 40%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능위주전형 40% 이상을 결정하였습니다.



### Q3. 2028학년도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수능체제는 무엇인가요?

- 현행 객관식 평가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, 4차 산업혁명·인구절벽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제가 필요합니다.
-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,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
### Q4. 논술위주전형과 어학·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학생·학부모의 대입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·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※ 국정과제 : ‘논술 및 교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’

**Q5. 사회통합전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?**

- ☐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·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,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합니다.
-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합니다.
- ☐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, 이 중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%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,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%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입니다.

**Q6.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**

- ☐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.
- 이에,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·평가·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함으로써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.

**Q7.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면, 학종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지요?**

- 각 대학은 여전히 ‘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\*’ 및 ‘교과세특’, ‘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\* 자율활동 특기사항, 정규 동아리 특기사항,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,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

-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·평가한 ‘360° 다면 평가 결과’이므로,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**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기재항목 및 내용】**

**① 교과학습 발달상황**

• 성적 정보 : 원점수, 과목평균, 성취도, 석차등급 등

•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: 과목당 500자/1년(고교 3년간 이수 ≒ 40과목, 약 23,000자)

※ 3년간 총 40여 명의 교과담당 교사가 성취수준, 학습활동 내용, 참여도, 구체적인 성장 사례 등 학생참여 수업과 과정 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360° 다면 평가

**②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**

• 학급담임이 수시로 관찰하여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종합의견

• 3년간 총 1,500자(500자/1년)가 기재되며, 교과학습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포함

**Q8. 2018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 중 시민참여단은 ‘수상 경력 항목 대입미제공’ 방안을 합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,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해당 방안을 확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**

- 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을 만큼 당시 시민참여단도 ‘수상경력의 대입 미제공’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.
- 수상경력의 교육적 순기능과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내 수상 경력 항목은 유지하되,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| <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결과 >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개선 방안(안)                | 찬성 비율(양해 가능 포함) |
| 수상경력 삭제                 | 43.3%           |
| 수상경력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 | 80.4%           |
| <b>수상경력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</b> | <b>63.9%</b>    |

**Q9.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로 교사의 기재 부담이 가중되고 ‘셀프 학생부’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요?**

- 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 하지만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소위 ‘셀프 학생부’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,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.

Q10. 이번 방안이 ‘로또 학생부’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입니다.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?

- ☐ 기재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- ☐ 이에, 교육부는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재 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「교과세특 기재 표준안」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.
- ☐ 또한, 교사들의 학생중심수업, 과정중심 평가, 평가결과의 기록 역량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연수모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실습 위주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Q11. 지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기로 했는데,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☐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·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,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 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**Q12.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,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**

- ☐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
-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,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,
-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 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